

2022년도 대입 정시확대 권고

정시 현행보다 확대 권고... 구체적 비율 명시 안해 '학생 충원난' 전문대 등 정시확대 제외 검토 권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의 정시확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정시 확대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신 명확한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학생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정시확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들 대학들은 그동안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먼저 뽑아온 만큼 정시가 확대되면 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되면 이들 과목도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교육부로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 공론화 결과를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시민참여단은 대입 시나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인 '안'을 가장 많이 지지(52.5%)했다.

그러나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안'(48.1%)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공론화위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개편 권고안을 논

의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된 수능 위주 정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확대 비율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이 요구한 정시모집 비율 45% 이상 확대를 권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국가교육회의는 판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이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아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중간값인 약 39.6%"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다만 학생 수 감소, 수도권 대학 선호 등으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고 있는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정시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학이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학별 선발방법의 다

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교육회의의 설명이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현행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처럼 영어와 한국사에 한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이들 과목도 절대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 중장기적으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넘겨 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말까지 대입개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시



전주대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북 고창·무주·진안군 소재 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주대 찾아가는 입시 상담'을 진행했다.

전주대 '찾아가는 입시 상담'

정보 소외지역 '입시 고민 해소'

흔히 '대입은 정보전'이라고 한다. 아는 만큼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입시 박람회와 설명회, 상담 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놓여온 지역은 대입 정보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전주대는 이런 대입 정보소외를 해소하고 놓여온 지역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북 고창·무주·진안군 소재 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주대 찾아가는 입시 상담'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1, 2학년 학생도 입시 상담에 참여했다. 1, 2학년에게는 진로진학 상담과 학생부종합전형 소개 등으로 입시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돕고, 고3 수험생에게는 2019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사항과 전년도 입시 결과 안내 등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전주대 찾아가는 입시 상담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통상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시상담은 형식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입시상담은 1:1 맞춤형으로 진행하면서 상담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법, 올바른 면접 방법 등 수험생이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

전주대 입학처 이호준 처장은 "이번 찾아가는 입시 상담으로 수험생이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고, 대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주대학교는 찾아가는 입시 상담을 2017년부터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학생 62명의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박찬희 교수팀, 나노섬유 활용 과일 포장기술 개발

기존에 비해 유통기한 획기적 연장, 재사용도 가능 실제 토마토 실험서 최대 14일 유통기한 연장 확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다품종 소량으로 구매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인 안전한 포장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과일유통 시장에도 편의성을 높인 가공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장기술의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포장 기술을 전북대학교 박찬희 교수(공대 기계설계공학부)팀이 개발했다. 천연 허브 오일이 함유된 나노섬유를 이용해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복숭아나 토마토, 망고, 딸기 등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기술이다. 개발에는 농업법인회사 팜조아, (사)캠틱종합기술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기존 과일이나 식품 포장용 랩용기나 PE 플라스틱을 이용한 포장용기가

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없고, 일부 유리병 용기를 제외하고는 재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박 교수팀이 개발한 포장 기술은 유통기한을 혁신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에 일부만 적용된 나노섬유 멤브레인만을 교체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장용기 일부에 타공을 하고 이곳에 나노섬유를 부착해 원물이 숨을 쉴 때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고, 외부 박테리아와 수분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이용해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실제 토마토를 이용한 실험에서 기존

포장용기에 비해 14일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성능의 탁월성과 함께 그간 나노 섬유 멤브레인의 대량 생산기술 개발되지 못해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모두 고가라는 단점을 극복한 점도 극복해냈다. 전북대는 이미 폭 1m Roll to Roll 방식의 상향식 고속전기방사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대중화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희 교수는 "향후 전북대와 팜조아가 이 기술의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매출 향상과 함께 기존의 가공 농산물과 원물의 유통기간을 혁신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의 대중화에 노력해 지역뿐 아니라 국가 농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지역의 각계 단체 대표자 일동은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육을 살리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이루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하러 한다면 전교조 법외노조 직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 당장 이행해야"

권취소 권고를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직권 취소' 등을 포함해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장관에 권고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단체 대표자 일동은 "행정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에 삭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정부의 태도는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본질에 대한 오펜이자 촉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체없는 권고 이행"이라며 "행정개혁위가 시행령의 폐지를 권고했음뿐 아니라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제도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문적 상담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전북상담학회(전문상담가 27명)와 대한신경정신학회(진료기관 18개소)와 MOU를 맺어 오는 12월까지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제도는 업무 스트레스, 대인 관계, 가족문제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개인상담 및 진료를 진행하는 상담과 의사소통 관리 프로그램, 미술 심리 검사 등으로 진행되는 집단 상담으로 제공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공무원 상담지원제도'를 소속 직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 지난 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각급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앞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상담지원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